

#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구상의 가능성\*

- 사회적 질 제고와 관련한 연구노트 -

양 천 수\*\*

## I. 서 론

이 글은 우리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구상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전제적 작업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종의 연구노트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더 나아가 사회의 질과 같은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구상이 우리 사회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тезис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тезис을 근거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문제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문제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기초를 둔 인권구상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 하는 점이다. 셋째 문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중에서 첫째 문제는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그의 저작에서 충분히 해명한 바 있다. 필자는 별도의 논문에서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므로,<sup>1)</sup> 이 자리에서 이를 되풀이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 투고일자 : 2014. 11. 25 심사일자 : 2014. 12. 15 게재확정일자 : 2014. 12. 19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1)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2014. 8), 205-242쪽; 샌델에 관해서는 이밖에도 T. Halling, *Michael Sandel*

다음으로 둘째 문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논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제한된 지면을 갖고 있는 이 글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별도의 논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 번째 문제, 즉 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내놓을 수 있다. 첫째는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둔 인권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 II.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상호연관성

### 1. ‘사회의 질’ 개념

우선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란 경제적인 양적 성장의 의미를 넘어서 질적 성장 및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품격개념을 말한다.<sup>2)</sup> 이를 달리 “사회의 질이란 시민들이 그들의 복지와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sup>3)</sup>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의 질은 단순히 양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하던 종전의 경제발전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양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논의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와도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의 질 개념에서는 경제의 질적 성장과 분배 및 복지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나아가 사회 공동체 전체의 공존과 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사회의 질은 경제의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 배분 및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 등이 최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안정성과 응집성, 포용성, 역능성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und Michael Walzer. Zwei kommunitaristische Demokratietheorien im Vergleich* (München, 2003)도 참고.

2) ‘사회의 질’ 개념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상훈·정해식,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SQ)”,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3호(2010. 12), 94-121쪽 참고.

3) 안상훈·정해식, 위의 논문(주2), 95쪽.

## 2. 사회의 질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사회의 질 개념은 규제완화와 최소국가를 강조하는 종전의 자유지상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와는 결맞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의 질 개념은 사회적 공정 및 복지를 강조하는 롤스(J. Rawls) 식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더 잘 어울린다.<sup>4)</sup>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강조했던 ‘공정사회’ 역시 이러한 맥락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롤스 식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또한 사회의 질 개념을 모두 포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철학자 샌델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역시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를테면 사회의 질 개념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 특히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강조하는데,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 부분에서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차등원칙을 통해 아무리 사회적 복지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자유주의가 개인을 독립적 주체 또는 무연고적 자아로 보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연대적인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적 가치나 덕성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 더욱 정확하게 말해 ‘옳음’(the right)을 ‘좋은’(the good)보다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가 결국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 3. 사회의 질과 공동체주의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의 질 개념을 고려할 때 공동체주의적 요소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전개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흔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한다.<sup>6)</sup> 첫째, 자유주의가 전제로 하는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를 비판하면서 ‘연고적 자아’(encumbered self)를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주체는 그 주체가 속한 공동체의

4) 존 롤스의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존 롤즈,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참고.

5) 이에 관해서는 M.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참고.

6) 이에 관해서는 M.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Cambridge, Mass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art III;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8-10장 등 참고.

역사, 문화 등을 공유한다. 이를 공동체주의 철학자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 또는 ‘이야기하는 존재’(storytelling being)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둘째, 옳음(the right)을 좋음(the good)보다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와는 달리, 옳음이 옳음보다 우선한다고 말한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적 혹은 미덕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흔히 ‘공동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넷째, 자연적 의무 이외에는 계약적 의무만을 인정하려는 자유주의와는 달리, 연대성에 기반을 둔 연대적 의무 역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연대적 의무를 인정하는 공동체주의의 특성이 사회의 질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 대해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가 개인에게 복지를 선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연대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사회의 질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연대적 의무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의 질은 공동체주의적 요소 역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공생’ 개념이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4.0’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 (1) 공동체주의의 위험성

그러면 사회의 질 개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동체주의를 곧장 수용하면 되는 것일까?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회의 질 개념을 순수한 공동체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 폐해를 낳는 것처럼, 순수한 혹은 전통적인 공동체주의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가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자칫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다수가 결정한 것을 공동체의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를 ‘다수파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많은 경우 가치상대주의와 연결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공동체는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동체 다수의 결정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공동체의 미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sup>7)</sup> 공동체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였던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도를 긍정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예증한다.<sup>8)</sup> 이러한 맥락에서 샌델 역시 자신이 추구하는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sup>9)</sup>

“내 논증의 일부는 현대 자유주의의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주의라는 명칭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기는 하다. 하지만 이 명칭은 여러모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최근 정치철학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일었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은 온갖 논쟁거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항상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다.

이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은 다음 두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개인의 자유를 찬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가치 또는 다수의 의지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 간의 논쟁, 더 나아가 보편적 인권을 믿는 사람들과 상이하지만 활력 넘치는 문화·전통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 그것이다. 이 논쟁은 늘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옹호하려는 견해는 이러한 주장과는 무관하다. 무엇보다 공동체주의를 다수파주의로 이해하거나, 권리를 특정한 시간 또는 특정한 공동체에서 지배적인 가치와 연관시키려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롤스 식 자유주의와 내 견해 사이의 논쟁은 권리가 중요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문제는 좋은 삶의 개념을 가정하지 않은 채 권리를 확인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지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원칙이 서로 대립하는 시민의 도덕적·종교적 확신과 무관하게 중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문제의 핵심은 옳음이 좋음보다 앞서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공동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질을 실현하려면, 이렇게 전체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7) 이를 지적하는 M. Sandel,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Cambridge, Mass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252쪽.

8) 이에 관해서는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280쪽 아래.

9) M. Sandel, 앞의 책(주5), ix-x쪽; 번역은 이양수 박사의 번역을 바탕으로 하되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도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공동체주의가 바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생각한다.

## (2)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의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의 장점과 공동체주의의 장점을 취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설픈 절충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미 몇몇 뛰어난 사상가들에 의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 예증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 Habermas)는 그 유명한 ‘법의 대화이론’(Diskurstheorie des Rechts)에 기반을 두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변증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하였다.<sup>10)</sup> 또한 공동체주의자로 출발한 마이클 샌델 역시 최근에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로 자신의 이론적 태도를 바꾸면서, 어떻게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sup>11)</sup> 다만 하버마스의 이론이 좀 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 샌델의 이론은 좀 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가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2)</sup>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고려하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초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기초로 하여 사회의 질 개념을 확립하고 실현해야만, 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동체의 공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사회의 질 개념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 III.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인권구상의 상호연관성

### 1.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사이의 매개체로서 인권

위에서 필자는 사회의 질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상호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구상하고자

10) 이에 관한 상세한 논증은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2. Aufl. (Frankfurt/M., 1994) 참고.

11) M. Sandel, 앞의 책(주7), 252쪽.

12)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21세기북스, 2006), 127쪽 아래.

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은 어떻게 사회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다루었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일종의 정치철학적 이념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정책을 펼치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회의 질을 구체적으로 제고할 수 없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사회의 질을 드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려면,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 필요하다. 필자는 인권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두어 인권을 구상하면, 이러한 인권을 통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합당하게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2. 인권에 대한 편견 제거 필요성

그러면 어떻게 인권이 사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인권에 관해 존재하는 막연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인권 개념을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부지어 바라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인권 개념을 이른바 좌파적 사회비판세력과 연결시킴으로써 이를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sup>13)</sup>

인권의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들춰보면 알 수 있듯이,<sup>14)</sup> 인권은 자연권의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하였다. 시민혁명이 서구사회를 휩쓸던 당시 인권은 곧 시민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 때 말하는 ‘시민’은 지금처럼 이른바 ‘못 가진 자’(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부르주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권의 주체인 시민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뜻하였다. 그 때문에 근대 시민혁명 당시 처음 등장한 인권 개념은 생명, 신체, 자유와 함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중요한 인권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마르크스(K. Marx)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인권을 부르주아들의 권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다.<sup>15)</sup> ‘못 가진 자’를 위한 인권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사회권이 인권에 편입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인권은 애초에 시민을 위한 권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오늘날에 인권

13) 아래의 내용은 양천수, “합리적인 인권정책의 방향: 인권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이론과 실천』 제9호(2011. 12), 156-157쪽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우선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9), 49쪽 아래 참고.

15) 조효제, 위의 책(주14), 82쪽 아래.

은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로 승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권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을 어느 특정한 집단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시민사회의 인권운동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권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를 위한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대 서구에서 등장한 근대적 인권이 그 당시 서구사회를 지배하던 봉건적 사회구조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 개념이 사회변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인권 개념을 활용하는 전략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권 개념을 사회적 소수자와 연결하여 파악하기 시작하면, 인권 개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인 보편성을 상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권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권리로 규정하면, 인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권리일 수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인권은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인 권리가 아닌, 특정한 이들을 위한 특수한 권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을 자신의 권리로 삼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인권을 자신들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로써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 인권 및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모든 노력들은 이론적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인권을 우리 사회의 특정한 집단을 위한 권리로만, 이를테면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권리로만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정한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고, 또 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들만을 위해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필자는 공익과 인권을 대비시키면서, 공익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인권은 어느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승인되고 있는 인권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은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인권 개념이 자유주의적 맥락과 공동체주의적 맥락을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 역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 인권과 자유주의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되돌아와, 어떻게 인권이 사회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인권은 각 주체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익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 주체들은 인권을 통해 자기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각자에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각 개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인권은 자유주의가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4. 인권과 공동체주의

그러나 인권은 이렇게 각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 인권이 자유주의적 맥락에만 머물러 있다면, 인권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매개할 수도, 또 이를 통해 사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없다. 필자가 볼 때, 인권은 이를 넘어서 공익 혹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이론가들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인권을 넘어서 연대적 인권 역시 인권의 새로운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sup>16)</sup> 게다가 사회 공동체의 각 영역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인권은 자유주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주의와 관련된 이익 및 의무까지 자신의 시야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도 사회의 질 개념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권이 공동체주의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 IV. 글을 맺으며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보면, 어떤 점에서 사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구상의 가능성을 다룰 필요가 있는지 명확해진다. 이미 논증한 것처럼, 필자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인권이야말로 우리 삶 및 사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말 그대로 아직 ‘거친 구상’에 머물러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이란 무엇인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구상이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이 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구노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정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6) 이를 보여주는 조효제, 앞의 책(주14), 276쪽 아래.